

[안전신문고] '세계적 수준' 대한민국 재난 지원정책 3가지 한계

✎ 중부매일 | ⓒ 승인 2025.05.13 18:15

라정일 일본 간사이가쿠인대학 재해부흥제도연구소 교수



부처님 오신 날인 5일 오전 경북 의성군 고운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린 가운데 신도들이 '경북 산불'로 폐허가 된 경내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 연합뉴스

"1억이고 2억이고,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내 집 돌려줘!"

2022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의 절규가 아직 귓가에 맴돈다. 재난 현장에서 만난 이재민들의 눈빛에는 물질적 손실을 넘어선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삶의 역사와 추억, 정체성이 담긴 공간이기에 집을 잃은 이들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도 온전한 위로가 되기는 어렵다.

대형 재난이 닥칠 때마다 언론에서는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반복된다.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재해구호는 세계 수준이다.

자연재난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월세 단칸방도 지진화재보험 없이는 빌릴 수 없으며,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는 최소한의 생활 지원만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수리나 재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피해만으로 국가·지자체가 상당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2019년 강원 산불 재난 전소 세대는 국민 성금을 포함해 1억원 이상, 2022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게는 최대 2억원 가까이 현금 지급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다. 2022년 동해안 산불 때부터 적용된 주택 '면적' 기준 지원은 논란을 낳았다. '주택자산이 곧 인생 전부'인 우리 현실에서는 2019년 강원 산불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주택 가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부정 사례로 인한 제도 신뢰성 문제다. 대부분 이재민은 정당한 지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일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나 창고 등을 주택으로 피해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진정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가야 할 자원의 분산과 갈등을 일으킨다.

셋째,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다. 지금까지 산불 복구계획은 산림 복원에 예산이 집중돼, 정작 이재민 생활 지원에는 3~15% 정도만 사용됐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로 1조1천억원이 구호금, 생계비, 주택복구 비용으로 배정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이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재민 중심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재해구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성금으로 이뤄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구호지원 단체의 대규모 지원,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활동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2019년과 2022년 산불 재난에서 정부 지원보다 성금 지원 규모가 몇 배나 더 컸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민간의 유연한 지원 덕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대피소의 급식, 물품 지원과 같이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인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서비스조차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당연한 듯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대피소 내 설치된 구호 텐트, 세탁차, 밥차 역시 지자체나 정부 물품이 아니라, 민간기관의 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형식적인 '민관협력'을 넘어 '민간주도-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단순 구호를 넘어 재난복구와 지역 회복력 강화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피해 주민의 필요를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설정하며, 정부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타버린 집은 다시 지으면 되겠지만, 마을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한 이장의 말은 재난복구의 궁극적 목표가 물리적 재건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에 있음을 일깨운다.

또한 재난 피해 지역 대부분이 이미 지방 소멸을 겪고 있기에 재난은 그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물질 지원에 더해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돌봄과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재해구호가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긴급구호지원을 기반으로 '회복과 돌봄 지원', '공정한 지원', 그리고 '민간 주도의 맞춤형 지원'으로 나아갈 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필요가 자리해야 한다.



라정일 교수



중부매일 newmedia@jbnews.com